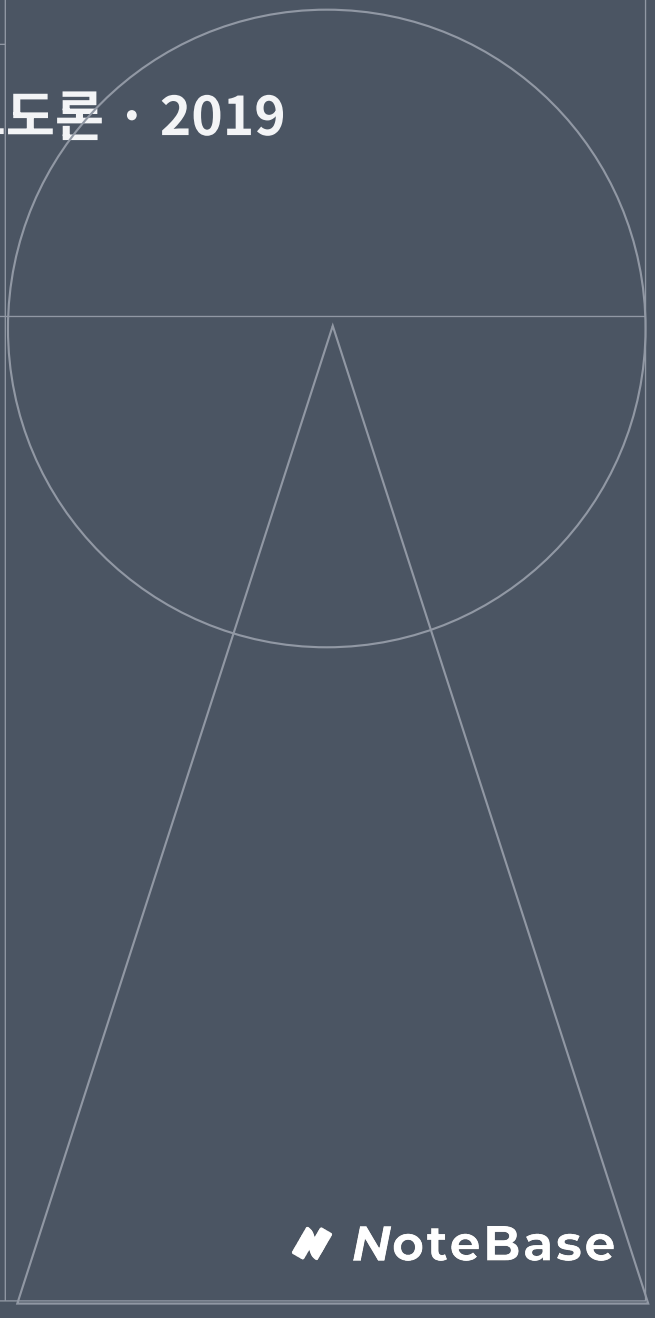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9

공무원/국회직/9급 · 취재보도론 · 2019

1. **기사 문장을 작성할 때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리드(lead)라고 한다. 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사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문장이다.
②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기능을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의문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④ 육하원칙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
⑤ 뉴스의 전체 내용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사의 첫머리인 리드의 역할과 작성 원칙을 묻는다. 특히 육하원칙과 간결성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리드는 기사 첫머리에서 핵심 내용을 압축해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부분이다. 리드에는 기사 이해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선별해 담으며, 육하원칙을 기계적으로 모두 넣어 길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기사 성격과 전달 효과에 따라 의문문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리드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압축하여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옳다.
② O — 첫머리에서 독자나 시청자의 주의를 끌어 기사 본문으로 이끄는 기능을 하므로 옳다.
③ O — 기사 내용과 표현 목적에 따라 의문문 형식의 리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육하원칙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이다. 리드는 육하원칙을 무조건 모두 나열하는 부분이 아니라, 핵심 요소를 선별하여 짧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O — 리드는 전체 뉴스의 핵심을 압축해 보여 주므로 독자가 뉴스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오답 포인트

육하원칙이 기사 작성의 기본 요소라는 사실을 '리드에 여섯 요소를 반드시 모두 넣어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④를 놓치기 쉽다. 리드에서는 정보의 완전한 나열보다 핵심성·간결성·명료성이 우선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드에 관한 선지는 '핵심 요약, 관심 유도, 신속한 이해, 간결한 표현'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육하원칙을 반드시 모두 포함한다'거나 '길어져도 된다'는 절대적 표현은 리드의 간결성 원칙에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리드는 핵심을 짧고 선명하게 제시한다. 육하원칙은 필요한 요소를 선별하며, 전부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2.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 표현이 강조하는 뉴스가치는 무엇인가?

① 부정성(negativity)
② 중요성(significance)
③ 관련성(relevance)
④ 근접성(proximity)
⑤ 희귀성(novelty)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상적이지 않고 예상 밖인 사건을 뉴스로 만드는 뉴스가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정성은 갈등·피해·재난처럼 부정적인 사건이 주목받는 성질이다. 중요성은 많은 사람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뉴스가치가 높아지는 성질이다. 관련성은 사건이 수용자의 관심·생활과 관련될수록 주목받는 성질이고, 근접성은 사건이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주목받는 성질이다. 희귀성은 평범한 예상에서 벗어난 새롭고 이례적인 사건이 뉴스가 되는 성질이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은 흔하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대비는 희귀성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 부정성은 사건의 갈등·피해·재난 등 부정적 성격이 뉴스가치를 높인다는 기준이다. 이 표현은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이례성을 강조하므로, '부정성'이 아니라 '희귀성'이 올바르다.
② X — 중요성은 사건이 다수의 사람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이 표현은 영향의 규모를 말하지 않으므로, '중요성'이 아니라 '희귀성'이 올바르다.
③ X — 관련성은 사건이 수용자의 관심이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이 표현은 수용자와의 관련성을 말하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아니라 '희귀성'이 올바르다.
④ X — 근접성은 사건이 수용자에게 지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까운지를 보는 기준이다. 이 표현은 거리나 친밀도를 말하지 않으므로, '근접성'이 아니라 '희귀성'이 올바르다.
⑤ O — 사람이 개를 무는 사건은 통상적인 예상을 뒤집는 드물고 이례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표현이 강조하는 뉴스가치는 희귀성이다.

오답 포인트

'문다'는 말의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① 부정성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두 문장을 가르는 핵심은 행위의 부정성이 아니라 '흔한가, 이례적인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건의 피해·갈등을 강조하면 부정성,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하면 중요성, 수용자와의 관련을 강조하면 관련성, 거리나 심리적 가까움을 강조하면 근접성, 예상 밖의 새로움과 이례성을 강조하면 희귀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가 사람을 물면 일상,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는 희귀성의 대표 표현이다.

NoteBase

3. 사설이나 칼럼 등 평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표현하되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② 평론은 특정 정당, 세력,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해선 안 된다.

③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한 경우 언론사는 비판 받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평론은 공동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돕도록 해야 한다.

⑤ 신문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설·칼럼과 같은 평론이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제시하는 글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설은 주요 현안에 관한 언론사의 공식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글이고, 칼럼은 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평가하는 글이다. 둘 다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만, 사실 전달이 중심인 일반 보도 기사와 달리 찬성·반대나 가치 판단을 명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 공익성, 논리성 및 반론권을 지켜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평론은 검증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전개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한쪽 관점만 부당하게 강조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특정 정당, 세력,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해선 안 된다'이다. 평론은 특정 정당·세력·후보자에 관하여 근거 있는 지지나 반대 의견을 명시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고 공익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지지나 반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③ O — 평론이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했다면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논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O — 평론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독자가 공적 사안을 숙고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⑤ O — 신문 사설은 언론사의 공적 견해를 나타내는 글이므로 소속 언론사의 영업상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지지나 반대를 표명해선 안 된다'는 표현은 평론을 사실 전달 중심의 일반 보도 기사와 혼동하게 만든다. 평론은 의견 표명이 본질이며, 제한되는 것은 의견 자체가 아니라 사실 왜곡, 근거 없는 주장, 사익을 위한 편파적 논평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설·칼럼 문항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명'과 '의견을 배제한 사실 전달'을 구별한다. 의견·평가·찬반 표명은 평론의 기능에 해당하고, 사실 왜곡·반론권 침해·상업적 사익 대변은 평론의 원칙에 어긋난다.

암기 포인트

보도는 사실 전달, 평론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 제시이다.

NoteBase

4. 언론은 외부 간섭 없이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뉴스 수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뉴스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는?

①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② 우리사주조합 제도
③ 게이트키퍼 제도
④ ABC 제도
⑤ 옴부즈맨 제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언론의 자율적 내부 비판·감시 장치와 언론 분쟁 조정, 종업원 지주, 뉴스 선별, 발행 부수 인증 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옴부즈맨 제도는 언론사가 수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듣고 보도 내용을 비평·점검하여 뉴스 제작에 반영하는 자율적 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언론 보도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제도이고,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게이트키퍼 제도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보도할 뉴스를 선택·통제하는 기능을 뜻하며, ABC 제도는 신문·잡지 등의 발행 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인증하는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언론중재위원회 제도'가 틀린 표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와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관이므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수용자 의견을 제작에 반영하는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이다.
② X — '우리사주조합 제도'가 틀린 표현이다. 이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 제도이므로, 문제의 설명은 '옴부즈맨 제도'로 고쳐야 한다.
③ X — '게이트키퍼 제도'가 틀린 표현이다. 게이트키핑은 취재된 정보 중 무엇을 뉴스로 보도할지 선택하고 통제하는 기능이므로, 수용자 의견을 듣고 제작에 반영하는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이다.
④ X — 'ABC 제도'가 틀린 표현이다. ABC는 신문·잡지 등의 발행 부수를 객관적으로 조사·인증하는 제도이므로, 문제의 설명은 '옴부즈맨 제도'로 고쳐야 한다.
⑤ O — 옴부즈맨 제도는 언론사가 외부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수용자 의견과 불만을 듣고 보도를 비평·점검하여 뉴스 제작의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⑤는 모두 언론 보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①은 보도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외부적 구제 장치이고, ⑤는 언론사 내부에서 수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보도를 개선하는 자율적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언론사 자체 도입·수용자 의견·보도 비평·제작 반영’이 함께 나오면 옴부즈맨으로 판단한다. ‘피해 분쟁 조정’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내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뉴스 선택’은 게이트키퍼, ‘발행 부수 인증’은 ABC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옴부즈맨은 수용자의 목소리를 언론사 안으로 가져오는 자율적 보도 감시 장치이다.

NoteBase

5. <보기>에서 언론보도의 부정적인 관행을 나타내는 용어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
ㄴ.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
ㄷ. 옐로우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ㄹ. 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
ㅁ. 집단 저널리즘(collaborative journalism)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언론 보도의 부정적 관행을 가리키는 용어와 특정 관점·협업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은 기자들이 독자적으로 취재·판단하기보다 다른 기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며 보도하는 관행이다.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은 상대방의 실수나 곤란한 발언을 유도하여 이를 공격적으로 부각하는 보도 관행이다.
옐로우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은 사실의 정확성과 공익성보다 선정성·과장성을 앞세워 관심을 끄는 보도 관행이다.
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은 특정 가치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도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가 곧 부정적 관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집단 저널리즘(collaborative journalism)은 여러 언론인·언론사 등이 자료와 역량을 공유하여 공동 취재·보도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가 부정적 관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정적인 관행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과 ㄷ은 부정적 관행이지만 ㄱ도 포함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ㄱ을 제외한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ㄷ은 부정적 관행이지만 ㄹ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 방식이므로 그 자체를 부정적 관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ㄹ을 포함하고 ㄱ·ㄴ을 제외한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O — ㄱ은 획일적인 몰이식 보도, ㄴ은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보도, ㄷ은 선정적·과장된 보도를 뜻하므로 세 용어가 모두 부정적인 언론 관행에 해당한다.
④ X — ㄱ과 ㄴ은 부정적 관행이지만 ㄹ은 특정 가치나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 방식이다. 틀린 부분은 ㄷ 대신 ㄹ을 넣은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⑤ X — ㄱ과 ㄷ은 부정적 관행이지만 ㅁ은 공동 취재와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보도 방식이다. 틀린 부분은 ㄴ 대신 ㅁ을 넣은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주창'과 '집단'이라는 번역어만 보고 편향이나 획일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ㄹ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 방식이고, ㅁ은 협업 방식이다. 반면 ㄱ의 pack은 협업이 아니라 기자들이 무리 지어 동일한 시각을 되풀이하는 부정적 관행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를 보도의 폐해와 보도의 방식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몰이식 동조(pack), 실수 유도(gotcha), 선정·과장(yellow)은 폐해에 해당하고, 입장 지지(advocacy)와 공동 취재(collaborative)는 방식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관행은 '패거리·가차·옐로우', 보도 방식은 '주창·집단'이다.

NoteBase

6. 범죄현장이나 재판과정을 취재 보도할 때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① 경찰이 연행한 살인사건 용의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신속하게 보도한다.

②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판의 판결문을 미리 입수하여 재판이 열리기 5분 전에 특종 보도한다.

③ 시청자나 독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기가수 A씨가 사용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상세히 보도한다.

④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어서 보도한다.

⑤ 재판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판사의 판결 내용을 촬영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범죄·재판 보도에서 인권 보호, 공정한 재판, 사생활 보호, 취재 질서, 독자의 이해라는 직업윤리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범죄·재판 보도 윤리는 신속성과 흥미보다 피의자·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 재판의 공정성,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원칙이다. 반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확한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 언어로 풀어 쓰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바람직한 보도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의 얼굴을 단지 신속한 보도를 위해 촬영·공개하면 인격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용의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신속하게 보도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공익성과 신원 공개의 필요성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과 신원을 식별할 수 없게 보도한다.
② X —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판결문을 미리 입수해 특종 보도하면 보도 시점의 공정성과 재판 절차를 해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재판이 열리기 5분 전에 특종 보도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정당한 취재 절차와 보도 가능 시점을 지키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한다.
③ X — 유명인의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전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약물 오남용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틀린 표현은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상세히 보도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사건의 공익적 핵심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나 모방을 부를 수 있는 구체적 사용 정보는 최소화한다.
④ O — 재판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를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일상 언어로 풀어 보도하는 것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정확하고 친절한 보도이다.
⑤ X — 재판정에서 허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판결 선고 장면이나 내용을 촬영하면 법정 질서와 정당한 취재 절차를 해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스마트폰으로 판사의 판결 내용을 촬영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법정의 촬영 제한과 허가 절차를 지키고, 공식 판결문이나 허용된 취재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보도한다.

오답 포인트

①·②는 '신속한 보도'와 '특종', ③은 '상세한 정보', ⑤는 '정확한 기록'이라는 언론의 긍정적 가치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그러나 그 수단이 인권, 재판의 공정성, 사생활, 법정 질서를 침해하면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④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높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범죄·재판 보도 선지는 목적과 수단을 나누어 판단한다. 독자의 이해를 높이면서 정확성을 지키는 행위는 적절하지만, 얼굴 공개·선행 보도·약물 정보의 과도한 상세화·무단 촬영처럼 인권이나 재판 절차를 침해하는 수단은 부적절하다.

암기 포인트

범죄·재판 보도는 신속·특종보다 인권·공정성·사생활·법정 질서가 우선이며, 어려운 법률 용어의 정확한 쉬운 풀이는 허용된다.

NoteBase

7. 취재 보도에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재해와 재난을 당한 유족들의 촬영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울부짖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한 경우

ㄴ. 1인 시위 중인 사람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한 경우

ㄷ. 광고용으로 허락받은 사진을 월간잡지의 화보에 사용한 경우

ㄹ.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유명 스포츠 스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한 경우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취재·보도를 위한 촬영과 초상 이용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촬영 대상과 장소, 보도의 공익성, 촬영·공표 방법의 상당성, 당사자의 동의 범위, 영리적 이용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초상 촬영이나 공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과 방법도 부당하지 않다면, 공적 관심과 초상권 보호를 이익형량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도 공적 인물인지, 공적 관심사인지, 당사자가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관여했는지, 촬영·보도 방법이 상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ㄱ: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족이 명시적으로 촬영을 거부한 사적 비탄 장면을 촬영·보도하는 것은 재해·재난 자체의 공익성과 별개로 유족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인 시위는 자신의 주장을 일반에게 알리려는 공개적 의사표현이므로, 시위 장면을 그 내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로 본다.
ㄷ: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광고용으로 허락한 사진을 월간잡지의 표지에 쓰는 것은 허락받은 이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공표이므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ㄹ: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명 스포츠 스타는 공적 인물이고 대학 졸업식은 공개 행사이므로, 졸업식 참석 장면을 공적 관심사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로 본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ㄹ은 침해가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침해가 아닌 ㄴ이 빠져 있다.
- 틀린 표현: ㄹ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ㄴ, ㄹ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 ㄴ은 침해가 아니지만, 촬영을 거부한 유족을 촬영한 ㄱ은 침해에 해당하며 ㄹ도 누락되어 있다.
- 틀린 표현: ㄱ, ㄴ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ㄴ, ㄹ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 공개적인 1인 시위 장면을 관련 보도로 다룬 ㄴ과 공적 인물의 공개 행사 참석 장면을 보도한 ㄹ은 통상적인 취재·보도 범위에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 ㄴ과 ㄹ은 침해가 아니지만, 광고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 사진을 잡지 표지에 사용한 ㄷ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틀린 표현: ㄴ, ㄷ, ㄹ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ㄴ, ㄹ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X
- ㄱ은 명시적인 촬영 거부를 무시한 경우이고, ㄷ은 동의한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ㄱ, ㄴ, ㄷ, ㄹ 모두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ㄴ, ㄹ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ㄱ, ㄷ은 침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공익적 사건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초상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ㄱ은 재난 보도라는 공익성보다 유족의 명시적 거부와 사적 비탄 장면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ㄷ은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이용이 허락된 목적을 벗어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가 없다면 대상이 공적 인물인지, 장면이 공적 관심사인지, 촬영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지, 보도 목적과 방법이 상당한지를 종합한다.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적 장면이나 허락한 용도를 벗어난 이용은 침해 쪽으로, 공적 인물·공개 활동을 관련 보도에서 통상적으로 다룬 경우는 비침해 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초상권은 동의 범위가 출발점이고, 예외는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상당한 보도 방법의 이익형량이다.

NoteBase

8. 다음 보도 사례 중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무자격자에게 마약류를 조제하도록 한 병원과 담당 의사를 실명 보도하였으나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②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만,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③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으나 발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기록원의 공문서를 토대로 취재 보도하였으나 공문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⑤ 경찰청의 공식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으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졌을 때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지, 허위라면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적 자료를 정확히 전달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상당한 이유 = 취재 당시 확보한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반론 취재 여부, 예상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정이다.

핵심 구분

형법 제310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만으로 진실성을 잃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더라도 기자가 충분히 확인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반면 보도자료에 의존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보도자료의 범위를 넘어 실명과 중대한 범죄사실을 단정하면서 적절하고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삼았더라도 병원과 담당 의사를 실명으로 특정하여 무자격자에게 마약류를 조제하게 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보도하려면 그 진위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위법행위를 단정하면서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핵심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 X
- 보도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진실한 사실로 본다.
- 틀린 표현: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
- 올바른 표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세부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 X
-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는 공적 의정활동에 관한 정확한 인용 보도이다. 기자가 그 발언의 기초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자신의 사실 주장처럼 보도한 사정이 없다면, 발언 내용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발언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기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
- 올바른 표현: 국회 내 발언을 그 출처와 함께 정확하게 보도한 경우에는 발언의 기초 사실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④ X
- 국가기록원의 공문서는 공적 기관이 작성·보관한 자료이므로, 기자가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취재·보도했다면 이를 신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공문서 자체의 내용이 뒤에 허위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자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공문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기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
- 올바른 표현: 공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보도하고 이를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문서 내용이 허위여도 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⑤ X
- 경찰청의 공식 기자회견은 신빙성이 높은 공적 취재원이다. 기자가 공식 발표임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했으며 별도의 허위 내용을 보태지 않았다면, 발표 내용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틀린 표현: 공식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인용 보도한 기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
- 올바른 표현: 공식 기자회견을 출처와 함께 정확히 인용하고 이를 신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①의 '보도자료를 근거로'라는 문구만 보고 곧바로 면책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공적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그 자료를 정확히 옮겼는지, 실명과 중대한 위법사실을 추가로 단정했는지, 필요한 확인 취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②는 핵심적 진실과 사소한 오류를 구별해야 하고, ③~⑤는 공적 출처를 그대로 전달한 인용 보도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본다. 핵심이 허위라면 기자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얼마나 확인했는지를 살핀다. 공적 발언·공문서·공식 기자회견을 출처와 함께 정확히 전달한 경우와, 그 자료의 범위를 넘어 실명이나 범죄사실을 단정한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핵심적 진실이면 세부 오류는 허용되고, 핵심이 허위이면 '정확한 인용·공적 출처·상당한 확인'이 책임을 가른다.

NoteBase

9. 기사를 작성할 때 범죄 피의자나 피해자의 실명 처리 문제는 명예훼손과 직결될 수 있다. 실명 처리에 대한 판단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내 갑질 사건으로 국제적인 물의를 빚은 대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선거공판 기사에서 조○○은 실명으로 쓴다.

②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고 교사 이○○은 성과 나이만 표기한다.

③ 세무 편의를 봐준 대가가 적다고 업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7급 세무공무원 황○○은 실명으로 쓴다.

④ 30대 남자강도를 맨손으로 붙잡은 여성 피해자 최○○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한다.

⑤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기초자치단체 의원 박○○은 실명으로 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피해자의 공적 인물성, 사건의 공익성, 사생활 및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명과 익명 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명 보도는 공적 인물의 공적 행위처럼 신원 공개의 공익이 큰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일반인의 피의사실은 유죄 확정 전이라는 점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는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익명 처리한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비위를 실명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위와 공적 인물성 및 공개의 공익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대기업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받는 재벌 2세 경영인은 공적 인물성이 크고 사건의 사회적 영향도 크므로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

② O — 여교사는 아직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계이고 일반인의 신원 공개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성별과 나이만 밝히는 익명 처리가 적절하다. 학교나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연쇄적으로 드러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③ X — 틀린 부분은 7급 세무공무원 황◯◯을 실명으로 쓴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 비위라는 사정만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실명을 곧바로 공개할 수는 없다. 고위 공직자나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7급 세무공무원 황◯◯'처럼 익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은 범죄 피해자이므로 신원 공개로 생길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한다.

⑤ O —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공적 인물이고, 폭행 혐의는 공직자의 책임과 자질에 관한 공적 관심사안이므로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이면 언제나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공무원 여부만 보지 않고 직위, 공적 인물성, 사건의 공익성, 신원 공개의 필요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도 대상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구분한다. 피해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보고, 피의자는 공적 인물인지와 사건의 공익성이 신원 공개로 생기는 인격권 침해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단순히 공무원이나 유명 기업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피해자는 2차 피해 방지, 피의자는 공적 인물성과 공익성 판단, 공무원은 직급과 공적 책임까지 확인한다.

NoteBase

10. 소셜 미디어는 뉴스 이용자의 성향, 관심사, 사용 패턴,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뉴스 이용자가 기존에 읽은 것과 비슷한 뉴스만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가 비슷한 성향의 뉴스와 의견만을 제공하면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①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② 미디어의 3자 인식(third-person perception)
③ 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
④ 필터버블(filter bubble)
⑤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기존 성향과 비슷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현상을 다른 미디어 효과 개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터버블은 알고리즘의 개인화된 정보 선별로 이용자가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정보에 둘러싸이고 다른 관점과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핵심 단서는 '알고리즘', '검색·이용 기록', '비슷한 뉴스의 반복 제공'이다.
적대적 매체 지각은 동일한 보도를 자기 편에 불리하고 상대편에 유리한 편파 보도로 인식하는 현상이다.
미디어의 3자 인식은 미디어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정향욕구는 어떤 사안이 자신에게 중요하면서 불확실할 때 정보를 얻어 방향을 잡으려는 욕구이다.
사회적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느끼는 친밀성 또는 심리적·사회적 간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적대적 매체 지각은 같은 보도를 자신의 입장에 적대적인 편파 보도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알고리즘이 유사한 뉴스만 선별하여 제공한다는 설명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필터버블'이다.
② X — 미디어의 3자 인식은 미디어의 영향이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크게 미친다고 보는 경향이다. 개인화된 정보 환경에 갇히는 현상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필터버블'이다.
③ X — 정향욕구는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정보를 얻고 판단의 방향을 정하려는 욕구이다. 기존 성향에 맞춘 정보의 반복 노출을 뜻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필터버블'이다.
④ O — 필터버블은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성향, 관심사, 이용 패턴, 검색 기록 등을 바탕으로 비슷한 정보만 계속 보여 주어 기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⑤ X — 사회적 거리는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서 느끼는 친밀성 또는 심리적·사회적 간격을 뜻한다.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현상이 아니므로, 올바르게는 '필터버블'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적대적 매체 지각도 이용자의 기존 성향과 관련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적대적 매체 지각의 초점은 '같은 보도를 편파적으로 지각하는 수용자의 인식'이고, 필터버블의 초점은 '알고리즘이 성향에 맞는 정보만 선별·반복 노출하는 정보 환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화 알고리즘, 검색 기록, 추천 시스템, 비슷한 정보의 반복 노출이 함께 제시되면 필터버블로 판단한다. 같은 보도를 자기 편에 불리하다고 느끼면 적대적 매체 지각, 타인이 자신보다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디어의 3자 인식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필터버블은 '알고리즘이 만든 내 취향의 정보 거품'이다.

NoteBase

11. 뉴스와 뉴스제작관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팟뉴스(spot news)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 사고, 현상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뉴스이다.

② 연성뉴스(soft news)는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잠시나마 골치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③ 출입처는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④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뉴스 제작과정에서 취재 지시를 하거나 기사를 취사선택하는 행위자를 지칭한다.

⑤ 역피라미드(inverted pyramid) 글쓰기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기술하는 방식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뉴스의 유형, 출입처 취재, 게이트키핑, 역피라미드형 글쓰기의 기본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팟뉴스는 돌발 사건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이고, 연성뉴스는 흥미·오락·인간적 관심을 중심으로 독자의 즐거움이나 휴식을 충족하는 뉴스이다.
출입처 취재는 기자가 특정 기관이나 분야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며 취재하는 관행이다. 이러한 담당 영역 중심 취재는 여러 나라에 존재하며, 한국과 일본의 폐쇄적인 기자단·기자클럽 운영 방식이 비교적 독특한 형태로 거론된다.
게이트키퍼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보도할 내용을 선택·배치하는 사람이고, 역피라미드형은 중요한 내용을 앞에 두고 세부 내용을 뒤에 배열하는 기사 작성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스팟뉴스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사고·현상처럼 시의성이 강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뉴스이다.
② O — 연성뉴스는 흥미와 오락성을 통해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이다. 특정 기관이나 분야를 담당하는 출입처·비트 취재는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올바르게는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폐쇄적인 기자단·기자클럽 중심의 운영 방식이 독특한 취재 관행으로 지적된다고 해야 한다.
④ O — 게이트키퍼는 뉴스 제작 과정에서 취재 대상을 지시하거나 수많은 기사 가운데 보도할 기사를 선택하는 등 정보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자이다.
⑤ O — 역피라미드형 글쓰기는 핵심 사실과 결론을 먼저 제시한 뒤 중요도가 낮은 세부 사항을 이어 쓰는 방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출입처 취재의 존재’와 ‘한국·일본식 기자단 운영의 특수성’을 같은 것으로 만든다. 담당 분야를 정해 취재하는 관행 자체가 두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직’, ‘반드시’, ‘~에만 존재’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표현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뉴스 유형은 내용과 기능으로, 취재 관행은 담당 영역과 운영 방식으로, 기사 구조는 정보가 배열되는 순서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스팟뉴스는 신속성, 연성뉴스는 흥미성, 게이트키퍼는 선택, 역피라미드는 중요 내용 우선이다. 출입처 취재는 여러 나라에 있고 운영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NoteBase

12. 선거보도가 정책 이슈 보도에서 벗어나 선거 판세에만 초점을 두는 경마식 보도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선거보도에서 어떤 뉴스가치가 부각된 현상인가?

① 흥미성
② 시의성
③ 정파성
④ 저명성
⑤ 영향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책과 공약의 실질보다 후보 간 경쟁, 지지율, 승패와 같은 선거 판세를 강조하는 경마식 보도가 어떤 뉴스가치를 부각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흥미성은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정도를 뜻한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를 승패가 갈리는 경쟁처럼 극적으로 제시하므로 흥미성을 부각한다.
시의성은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거나 현재의 관심사와 밀접한 정도, 정파성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친 성격, 저명성은 유명 인물·기관이 관련된 정도, 영향성은 사건이 사회와 수용자에게 미치는 결과의 크기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마식 보도는 후보 간 우열과 승패 경쟁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기 때문에 흥미성을 부각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은 보도 대상의 최근성과 현재성을 뜻하며, 판세와 승패에 초점을 두는 현상은 시의성보다 흥미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파성'이다. 정파성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는 성격이며, 후보 간 경쟁을 경주처럼 보여 주는 현상은 정파성보다 흥미성이 부각된 것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저명성'이다. 저명성은 유명한 인물이나 기관이 뉴스에 포함되어 주목받는 가치이며, 선거 판세 자체를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현상은 저명성보다 흥미성이 부각된 것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영향성'이다. 영향성은 사건이 많은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의 크기이며, 정책의 사회적 효과보다 승패 구도를 강조하는 현상은 영향성보다 흥미성이 부각된 것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거 보도는 현재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유명 정치인이 등장하므로 시의성·저명성과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표현은 '정책 이슈에서 벗어나 선거 판세에만 초점'이라는 점이다. 이는 선거를 경쟁과 승패의 이야기로 만들어 흥미를 높이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지율, 순위, 우세·열세, 승패 전망처럼 선거를 경주로 묘사하면 경쟁의 극적 재미를 강조한 것이므로 흥미성으로 판단한다. 최근성은 시의성, 유명인의 등장은 저명성, 사회적 파급효과는 영향성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경마식 보도는 정책보다 판세, 판세는 경쟁과 승패, 경쟁과 승패는 흥미성이다.

NoteBase

13. 언론사가 온라인 뉴스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며 실질적으로 같은 기사를 반복 송고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는?

① 가짜뉴스
② 프라이밍
③ 컨버전스
④ 블록 편집
⑤ 어뷰징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온라인 뉴스의 조회 수를 높이려고 제목이나 내용을 조금씩 바꾼 유사 기사를 반복 송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어뷰징: 검색 노출과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제목·내용만 조금 바꾸어 반복 송고하는 행위이다.
가짜뉴스는 거짓·조작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유통하는 것이고, 프라이밍은 언론이 강조한 쟁점이 수용자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컨버전스는 매체·기술·콘텐츠 등의 융합이며, 블록 편집은 기사와 사진 등의 편집 요소를 덩어리 단위로 구성하는 편집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짜뉴스는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뉴스처럼 만들어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표현은 '가짜뉴스'이며, 제시된 행위는 '어뷰징'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프라이밍은 언론이 특정 쟁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쟁점이 수용자의 평가 기준이 되게 하는 효과이다. 틀린 표현은 '프라이밍'이며, 반복 송고 행위는 '어뷰징'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컨버전스는 서로 다른 매체·기술·산업·콘텐츠가 결합하는 융합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컨버전스'이며, 조회 수를 노린 유사 기사 반복 송고는 '어뷰징'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블록 편집은 기사·제목·사진 같은 요소를 관련된 덩어리 단위로 묶어 지면을 구성하는 편집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블록 편집'이며, 제목이나 내용을 조금 바꾸어 같은 기사를 반복 송고하는 행위는 '어뷰징'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어뷰징은 포털 검색 노출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같은 기사를 제목이나 내용만 조금씩 바꾸어 반복 송고하는 행위이므로 문제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짜뉴스’도 부정적인 온라인 보도 현상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같은 기사의 변형·반복 송고’와 ‘조회 수 확대’를 함께 제시하므로 어뷰징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내용만 조금 변경’, ‘유사 기사 반복 송고’, ‘검색 노출·조회 수 증가’가 함께 나오면 어뷰징으로 판단한다. ‘허위·조작 정보’가 핵심이면 가짜뉴스, ‘강조된 쟁점이 평가 기준에 영향’이면 프라이밍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기사를 살짝 바꿔 반복 송고하면 어뷰징이다.

NoteBase

14. 보도자료를 이용해 보도할 때 주의할 점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도자료가 도착하면 보낸 사람이나 기관이 신뢰할 만한지 확인해야 한다.

② 정부부처나 국가기관이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으므로 그대로 보도해도 된다.

③ 보도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사실을 과장한 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④ 기업의 보도자료는 은연 중에 경쟁 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보도 후의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

⑤ 기자의 폭주하는 업무량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기사문 형태로 미리 작성해 배포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 배포 주체의 공신력만 믿지 않고 신뢰성, 이해관계, 과장 가능성, 보도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도자료는 기관이나 기업 등이 자신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이다. 기사 작성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배포 주체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출처 확인, 사실 검증, 교차 확인과 독립적인 기사 작성이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보도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하려면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보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출처의 전문성·공신력·이해관계가 자료의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비교적 신뢰성이 높으므로 그대로 보도해도 된다'이다. 정부부처나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도 오류, 누락 또는 기관의 관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도자료라도 내용을 검증하고 필요한 교차 확인을 거친 뒤 보도해야 한다.

③ O — 보도자료 작성 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선택하거나 과장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O — 기업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면 경쟁 기업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의 의도와 보도 이후의 파급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⑤ O — 기사문 형태로 미리 작성된 보도자료는 업무 부담을 줄여 주지만, 기자가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독립적인 검증과 판단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정부부처·국가기관'이라는 공신력 있는 명칭을 '무검증 보도 가능'과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출처의 신뢰도가 높다는 판단과 자료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해도 된다는 판단은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도자료 관련 선지에서는 배포 주체의 공신력과 별개로 출처, 사실관계, 이해관계, 과장 가능성, 파급 효과를 확인하는지를 본다. '그대로 보도한다', '검증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부적절한 원칙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보도자료는 기사의 재료이지 완성된 기사가 아니다. 공신력 있는 출처도 확인하고 검증한 뒤 보도한다.

NoteBase

15. 취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뉴스는 특정 사안에 관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치우침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기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자신과 생각이 같은 취재원이나 사례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④ 사회의 다수 의견이 항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소수 의견도 깊이 있게 취재 보도해야 한다.

⑤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관찰자의 입장을 넘어 시위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공정성 시비에 말려들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취재 보도의 공정성이 사실의 정확성뿐 아니라 관점의 다양성, 취재원 선정, 맥락 제시, 반론 기회, 기자의 중립적 태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확성은 보도한 사실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공정성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 관점과 맥락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취재 대상을 편향되게 고르지 않으며, 기자가 이해당사자로 직접 행동하지 않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실이 맞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공정성에 관한 책임을 모두 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공정한 보도는 특정 사안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제시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기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이다. 정확성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더라도 취재원 선정, 맥락 제시, 반론 기회와 관점의 균형까지 갖추어야 기자의 공정성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③ O —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견해와 같은 취재원이나 사례만 선택하면 선택 편향이 생기므로 공정성에 어긋난다.
④ O — 다수 의견이 항상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소수 의견도 충분히 취재하여 제시해야 한다.
⑤ O —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관찰자·보도자의 역할을 넘어 시위에 직접 참여하면 당사자가 되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같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 함정이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어도 특정 취재원만 고르거나 중요한 맥락과 반론을 누락하면 전체 인상을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성 문항에서는 사실이 맞는지만 보지 않고 관점의 다양성, 취재원 선택의 균형, 충분한 맥락과 반론 기회, 기자의 중립적 태도가 함께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정확하기만 하면 책임을 다한다’는 절대적 표현은 공정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다.

암기 포인트

정확성은 사실의 옳고 그름, 공정성은 선택·맥락·반론·태도의 균형이다.

NoteBase

16.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출입기자는 출입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
② 언론은 취재원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인터뷰를 할 때에는 취재원의 편의를 위해서 때로는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다.
④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⑤ 기자는 취재에 앞서 취재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자가 취재원과 관계를 맺을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적절한 긴장관계, 취재 편의, 신분 공개의 원칙을 묻는다.

핵심 개념

기자와 취재원은 정보 제공과 취재를 위해 협력하지만, 기자는 특정 취재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 건강한 긴장관계는 취재원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거리와 검증 태도를 잃지 않는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정당 출입기자가 해당 정당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출입처가 정당이더라도 기자는 그 정당의 대변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취재자이므로, 사실을 검증하고 공중의 관점에서 보도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정당 출입기자도 출입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기사를 써야 한다'이다.
② O — 언론과 취재원은 정보를 주고받되 서로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비판적 거리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O — 인터뷰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취재원이 필요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미리 알릴 수 있다. 이는 편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답변에 대한 검증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O — 기자는 취재원의 주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취재원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⑤ O —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기자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신분을 공개해야 취재원이 언론 보도를 전제로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정당 출입'과 '정당의 입장 대변'을 같은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출입처는 취재 대상일 뿐이며, 기자가 그 조직의 관점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취재원과의 관계를 묻는 선지는 '협조는 가능하지만 종속은 금지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재 편의나 신뢰 형성은 허용될 수 있지만, 특정 취재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독립성을 잃는 설명은 틀린다.

암기 포인트

취재원과는 협력하되, 보도 판단은 독립적으로 한다.

NoteBase

17. 언론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은?

① 「청탁금지법」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②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에는 숙박권, 회원권,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등은 포함되지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식사 등을 할 경우 1인당 3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⑤ 경조사비를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의 범위, 금품등의 정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금품등의 범위가 현금이나 물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금품등 = 금전·물품 같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와 그 밖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핵심 구분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는 숙박권·회원권·입장권뿐 아니라 할인권·초대권·관람권도 포함된다. 이 문항이 전제한 시행령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일반 선물 5만원, 농수산물 선물 10만원이었다.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음식물은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해당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15만원이고 정해진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에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포함된다.

② X
- 금품등에는 숙박권·회원권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뿐 아니라 할인권·초대권·관람권도 포함된다.
- 틀린 표현: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도 금품등에 포함된다.

③ O
- 이 문항이 전제한 당시 기준에서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1인당 3만원이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1인당 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④ O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라는 구분이 맞다.

⑤ O
- 이 문항이 전제한 당시 기준에서는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였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해당 상품권이 원칙적으로 15만원, 정해진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금품등을 현금·물품이나 접대에만 한정하는 데 있다. 법은 할인권·초대권·관람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용권도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본다. 또한 ③과 ⑤의 금액은 개정된 현행 기준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품등의 범위를 묻는 선지는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과 편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세 범주로 나누어 판단한다. 가액 기준을 묻는 선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일반 선물, 농수산물 선물을 구분하고 적용 시점의 시행령 기준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금품등은 돈·물건만이 아니라 할인권·초대권·관람권과 접대·편의까지 포함한다.

NoteBase

18. 방송뉴스용으로 표현을 바꾼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② 철야조사를 벌였습니다. →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③ 김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철수 기자의 보돕니다.
④ 사회악을 근절해야 합니다. → 사회악을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⑤ 이 병은 식이요법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 이 병은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방송뉴스 문장은 시청자가 한 번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쓰며, 불필요한 높임말·한자어·피동 표현·의미 중복을 줄여야 한다.

핵심 개념

방송뉴스용 표현은 문어적이거나 딱딱한 말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고, 길거나 겹치는 표현은 짧게 다듬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근절하다' 자체에 '완전히 뿌리 뽑다'라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완전히 근절하다'는 의미가 겹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말씀하셨습니다'를 '말했습니다'로 바꾸면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높임 표현을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② O — 한자어 '철야'를 쉬운 일상어 '밤샘'으로 바꾸어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 쉽게 했다.
③ O — '보도입니다'를 '보돕니다'로 줄여 방송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이다. '근절하다'에 이미 '완전히 뿌리 뽑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완전히'는 의미 중복이다. 올바르게는 '사회악을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⑤ O — '고쳐질 수 있습니다'라는 피동 표현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문장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했다.

오답 포인트

④의 '완전히'가 뜻을 강조해 방송에 더 적합해 보일 수 있지만, '근절'에 이미 완전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송뉴스 문장 다듬기에서는 쉬운 말, 짧은 문장, 객관적 표현, 능동 표현인지 확인한 뒤 같은 뜻이 겹치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방송뉴스 문장은 쉽고 짧고 직접적으로 쓴다. ‘완전히 근절하다’는 의미 중복이다.

NoteBase

19.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참고는 하되 기사화하지는 말라"는 의미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프 더 레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기 전에 기자가 공문서나 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②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어도 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취재원이 정보 제공 이전에 미리 그 의사를 밝혀야만 오프 더 레코드가 가능하다.

④ 현장 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에 동의했다면 데스크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⑤ 기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오프 더 레코드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취재원과 기자의 합의로 성립한다는 점과, 그 효력이 미치는 정보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사화하지 않기로 취재원과 기자가 합의하는 취재 관행이다. 취재원의 요청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며 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합의의 효력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 미치므로, 기자가 이미 독자적으로 확보한 자료나 직접 목격한 사실까지 당연히 비보도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 요청 전에 공문서나 자료를 이미 독자적으로 입수했다면, 그 정보는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로 제공한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까지 비보도 약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② O —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호 합의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보 제공 이전에 미리 그 의사를 밝혀야만'이다. 오프 더 레코드의 핵심 성립 요건은 요청 시점을 정보 제공 이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합의이다. 올바르게는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고 기자가 이에 동의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 현장 기자가 취재원을 상대로 오프 더 레코드에 동의했다면 언론사 내부의 데스크도 그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 현장 기자 개인만의 약속으로 보아 데스크가 임의로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⑤ O — 기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해 독자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취재원이 제공한 비보도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취재원이 같은 사건에 관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더라도 기자 자신의 목격 사실까지 당연히 구속되지는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미리'와 '해야만'이 함정이다. 오프 더 레코드를 정보 제공 전의 요청만 유효한 형식 요건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판단의 중심은 요청의 선후가 아니라 기자가 그 요청에 동의하여 비보도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재원의 요청과 기자의 동의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문제의 정보가 취재원에게서 제공된 것인지, 기자가 공문서·다른 자료·직접 목격을 통해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구분한다. 합의가 없거나 독자적으로 확보한 정보라면 오프 더 레코드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오프 더 레코드 = 취재원의 요청 + 기자의 동의, 적용 범위 =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NoteBase

20. 기자들이 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문화부 기자가 오페라 공연 업체에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공연을 취재했다.

ㄴ. 경제부 기자가 취재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

ㄷ. 출입한 기업에서 결혼기념일 선물을 보내줘서 감사하게 받았다.

ㄹ. 석유회사 최고경영자 부친을 둔 기자가 에너지 산업 실태를 취재했다.

①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자의 사적 이익·인간관계·금전적 혜택이 취재와 보도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준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 상황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해관계의 상충은 기자의 직업적 의무와 개인적 이익 또는 관계가 충돌하여 공정한 취재·보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보도가 왜곡된 경우뿐 아니라 외부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도 포함한다.

ㄱ: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연 업체로부터 무료 입장권을 받으면 경제적 혜택 때문에 보도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의 주식투자에 이용하면 직업상 정보를 사익에 사용한 것이 된다.

ㄷ: 출입 기업에서 보낸 선물을 받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호의나 보답의 압력이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ㄹ: 취재 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가까운 관계이면 취재와 보도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ㄴ의 취재 정보 이용뿐 아니라 무료 입장권, 출입 기업의 선물, 취재 대상 기업 경영자와의 친분도 이해관계의 상충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른다.
② X — ㄷ과 ㄹ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ㄱ의 무료 입장권 수수와 ㄴ의 취재 정보 사적 이용도 각각 경제적 혜택과 사익 추구로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른다.
③ X — ㄱ, ㄴ, ㄷ만 고르고 ㄹ을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석유회사 최고경영자와의 친분은 그 회사를 취재할 때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적 관계이다. 올바르게는 ㄹ도 포함하여 ㄱ, ㄴ, ㄷ, ㄹ을 고른다.
④ X — ㄱ, ㄷ, ㄹ만 고르고 ㄴ을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취재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행위는 직업상 정보를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사용한 전형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올바르게는 ㄴ도 포함하여 ㄱ, ㄴ, ㄷ, ㄹ을 고른다.
⑤ O — ㄱ의 무료 혜택, ㄴ의 취재 정보 사적 이용, ㄷ의 취재원 관련 선물, ㄹ의 취재 대상과의 친분은 모두 기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전부 이해관계의 상충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ㄷ의 선물이 결혼기념일 명목이라는 점이나 ㄹ이 단순한 친분처럼 보인다는 점 때문에 두 상황을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상충은 실제 기사 왜곡만이 아니라 취재 대상에게 심리적 빚을 지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까지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자가 취재 관련자에게서 혜택을 받았는지, 취재 정보를 사익에 사용했는지, 취재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이 요소가 취재·보도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외관상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면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혜택 수수·정보 사유화·선물·취재 대상과의 친분은 모두 공정성을 흔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NoteBase